1. 안녕하십니까? 평소 전주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2.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「중단·지연된 공공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」과 「전주시 재정 및 예산 운영의 적정성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3. 중단·지연된 공공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

대규모 투자사업(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시설사업) 가운데 현재 일시 중지된 사업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.

가. 사업별 당초 예산과 현재까지 투입액

○ 현재 일시 중지된 공사 중인 사업은 5건이며, 사업별 총사업비와 현재까지 투입액(기투자액, 예산액 기준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: 억원)

1)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
   - 총사업비 117(국비 33, 도비 10, 시비 74)
   - 기투자액 73(국비 33, 도비 10, 시비 30)

2)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
   - 총사업비 235(국비 6, 시비 229)
   - 기투자액 177(국비 6, 시비 171)

3) 지방정원 조성
   - 총사업비 166(도비 30, 시비 136)
   - 기투자액 128(도비 30, 시비 98)

4) 지방정원 생활문화센터 조성
   - 총사업비 66(국비 3, 도비 7, 시비 56)
   - 기투자액 23(국비 3, 도비 7, 시비 13)

5)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
   - 총사업비 1,421(국비 180, 도비 15, 시비 1,226)
   - 기투자액 1,079(국비 180, 도비 15, 시비 884)

나. 공사 중단 사유 및 추가 발생 비용

ㅇ 사업이 중지된 주된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다. 현재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(자주재원)으로는 인건비·복지·청소·교통 등 필수경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, 여러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가용 재원이 부족합니다. 이에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의 규모와 추진 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.

ㅇ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남은 사업비의 6%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 정확한 추가 비용은 사업이 끝나고 정산까지 마친 뒤에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.

다. 향후 사업 재개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

ㅇ 공사 중인 사업은 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, 남은 사업비가 적은 사업, 공사가 많이 진행된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, 쓸 수 있는 재원 범위 안에서 차례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.

4. 전주시 재정 및 예산 운영의 적정성

가. 지방채 및 전체 채무 규모와 향후 상환 계획

ㅇ 전주시 지방채의 잔액은 2026년 말 6,841억원으로 예상됩니다.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원금을 ’27년 241억원, ’28년 241억원, ’29년 296억원, ’30년 405억원씩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.

나. 재원 부족의 주요 원인

ㅇ 시 예산 가운데 시가 용도를 정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‘자주재원’이라고 합니다. 시민이 납부하는 취득세·재산세·자동차세 등 지방세와,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채워 주기 위해 나눠 주는 지방교부세가 대표적입니다.

ㅇ 이 가운데 지방세는 최근 3년간(’23~’25년) 해마다 평균 1.0% 늘어났습니다. 지방교부세는 정부 세금(국세)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크게 줄어, 보통교부세가 ’22년보다 ’23년에 735억원, ’24년에 867

억원 적게 들어왔습니다.

- ㅇ 그 결과 자주재원은 ’23년 1조 1,697억원에서 ’25년 1조 1,486억원으로 해마다 평균 0.9%씩 줄었습니다.
- ㅇ 반면 복지 급여, 직원 인건비, 쓰레기 수거·처리, 시내버스 지원처럼 해마다 반드시 나가야 하는 비용(의무지출)은 같은 기간 7,431억원에서 8,264억원으로 해마다 평균 5.5%씩 늘었습니다.
- ㅇ 이처럼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상황에서, 광역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컨벤션센터, 육상경기장, 실내체육관 등 대규모 시설 건립과 오래 미뤄 온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을 함께 추진하다 보니, 부족한 돈을 지방채로 메우는 일이 이어져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.

다.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편익 재평가 여부

- ㅇ 시는 민선 9기를 시작하며 외부 전문가로 「재정혁신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하였습니다. 위원회의 자문과 시의 자체 평가를 서로 비교·검증하여 104개 대규모 사업을 A(계속)·B(조정)·C(일시중지)·D(보류)·E(중단) 5개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.
- ㅇ 평가할 때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, 혜택을 받는 주민 수와 이용 수요, 완공 후 들어갈 운영비, 앞으로 남은 시 부담액 등을 살펴보았습니다. 조정안은 2026년 10월 시의회에 보고하였으며, 향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라. 시민 생활 직결 사업 우선 배정 및 예산 낭비 방지 대책

- ㅇ 2027년 예산(안)은 청소·대중교통·사회복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경비를 1년(12개월)분 모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 반영하였습니다.
- ㅇ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완공 후 운영비까지 따져 보는 사전 검토를 거치고, 행사성·소모성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. 또한 민간위탁금의 적정성을

검증하고, 출연기관 간 중복 업무를 조정하며, 시설비 사업은 관행적인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. 이렇게 아낀 예산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5. 귀하의 의견은 앞으로 재정 운용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.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주시 기획예산과 예산팀(☎ 063-281-2212)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